

# 22대 총선 지역 선거사범 147명...검·경 수사 본격화

### 광주 35건·53명, 전남 61건·94명...불송치·이첩 등 제외 공소시효 10월10일까지...수사당국 "8월11일까지 집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 147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11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및 인지

수사 등을 통해 각각 50건·69명, 69건·105명 등 총 119건·174명을 적발했다. 이 중 광주경찰청은 15건·16명을 불송치 또는 타 경찰청 이첩 등으로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35건·53명에 대해 수사

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8건·11명을 종결 처분했으며, 61건·9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광주·전남경찰청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해왔는데, 수사 종료까지 유형별 범죄 종류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간 폭

로 일부는 일찌감치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광주에서는 당선자 5명이 본인 또는 캠프 내 문제로 검·경 수사의 향배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A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허위 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간 유리한 보도가 나오도록 특정인을 매수

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C 당선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불법 전화방' 운영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D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나, 불법 금융투자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경쟁 후보와 서로 고발한 E 당선자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전남에선 4명의 당선자가 경찰에 입

건됐다. F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으로, 다른 3명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됐다. 수사 당국은 투표일로부터 6개월까지(10월10일)가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인 만큼 오는 8월11일까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낼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5·18정신 배우러 왔어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로 체험학습을 나온 관산구 봉산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민주영령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애리 기자

##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檢, 압수수색

### '부녀 운영' 도박사이트 비트코인 관련...광주경찰청·현직 경찰 자택 등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지방경찰청 정보통신 장비 운용 부서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모(35·여)씨를 구속수사하면서 범죄수익금

인 비트코인 1천788개(거래가 기준 1천430억원)에 대한 압수에 나섰다. 그러나 일일 거래량 제한이 나뉘어 압수하던 중 누군가 비트코인을 빼돌려 실제로 확보한 것은 320여개(최고가 기준 현금 250여억원 상당)에 그쳤다. 기소된 이씨는 사라진 비트코인에 대해 1·2심 모두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은닉에 관여했다고 보며 징역 5년·추징금 608억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추징금15억

여원으로 감형했다. 추징이 인정된 15억여원은 이씨가 아버지의 변호사비를 위해 사용한 것인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가상자산 투자사기범 탁모(45)씨가 비트코인의 현금화를 도왔다. 이후 이씨가 경찰에 잡히면서 탁씨가 수사 대상에 먼저 올랐고, 사이가 틀어진 성씨도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이씨의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후속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 무단횡단 70대, 유턴 차에 치어 사망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성당 주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안면부를 크게 다친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고가 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유턴 후 주행 방향이 바뀐 A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재영 기자

## 판결 2편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최근 정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63)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업주로 있는 식당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재영 기자

청소년들은 A씨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적발 시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안재영 기자

### 현역 판정 후 입영 전 검사·입대 안한 20대 집유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전 검사를 피하고 실제 입대도 하지 않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입영 전 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월10일까지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모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현역병 대상자가 입영 후 훈련소에서 판정검사를 받았으나, 지난 2022년부터 논산훈련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입소하는 이들은 지역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쥬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